

도, 7월 중앙공모사업 12건 선정

농생명산업 분야 6개
지역발전분야 4개
여행체험 1번지 2개

전북도는 2018년도 7월중 중앙공모사업에 탈산업특구 조성(5개 시·군, 50억원),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도, 10억원), 공공동물장묘 시설 설치지원(임실, 15억원), 소규모 재생사업(6개 시·군, 9.55억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김제·임실, 18억원) 등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6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앙공모사업에서 총 71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9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생명산업 분야에 탈산업특구 조성(5개 시·군, 50억원),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도, 10억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임실, 15억원) 등 6개 사업, 99억원 ▲지역발전 분야에 소규모 재생사업(6개 시·군, 9.55억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김제·임실, 18억원), 지자체 저출산극복 공모사업(남원, 4억원) 등 4개사업, 51.55억원 ▲여행체험 1번지 분야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사업(0.94억원),



1회용 컵 사용 금지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 컵(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의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안내 문구를 붙이고 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4.8억원) 2개 사업, 5.7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8월에는 7건, 1,083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靑, '난민법 폐지' 청원에 "다양한 대책 마련할 것"

"난민 협약 탈퇴 어렵다"

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된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와 한달만에 71만4875명이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이 청원

자는 현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보훈이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만에 70

만명이 넘었다"며 관련 대책을 묻자 박 장관은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고 답변 기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방향은 대충 잡았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로 진행하겠다"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생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여름철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완산구는 2일부터 10일까지 시민단체에 소속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와 삼계탕 취급 음식점 총68개소에 대하여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식재료,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상태 점검, △냉장·냉동제품 적정온도유지 및 유통기한 등 영업자 준수 여부, △식품표시기준, 무신고제품 사용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간이 세균오염 분석기(ATP)를 활용하여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식중독 예방 위생수칙 및 예방요령을 현장 교육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 만끽'

임실 운암면 선거마을,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 추진
전통음식 판매·체험, 관광까지 즐기는 체험관 준공

"실컷 즐기고, 맛보시면서 느리게 무르익는 음식을 통한 삶의 가치를 만끽하세요"

임실군이 느리게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음식으로 승화시키는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의 주민중심형 모델을 선보이며 슬로푸드 메카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임실군은 1일 운암면 선거마을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체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체험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심 민 군수와 한완수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은 전북도에서 추진한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은 슬로푸드 체험장 신축과 체험장비 등 하드웨어와 주민역량강화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하다.

건립된 체험관은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199.24㎡ 규모로 최대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식생활개선프로그램 운영과 쉬나리 팔을 이용한 앙금 플라워, 꽃을 이용한 청과 켈

등 다채로운 음식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 임실군은 서양의 대표적인 치즈 분산지로 끌어올린 저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다.

그 덕에 지역의 독거노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결혼가정 및 조손가정 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숲 체험, 텃밭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선거마을 전정환 추진위원장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건강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를 성장시킨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토대로 슬로푸드의 메카 임실군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치즈마을, 한옥마을 버금가는 '전북도의 대표 슬로푸드마을'로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구문제 해결, 지역에서 찾는다

무주군, 찾아가는 인구교육

무주군은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 찾아가는 군·공공기관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 임재일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공무원 2백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고령화 가속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과 해외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임재일 강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며 "가치관의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역은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요건을 개선해야 하며 아배육아를 독려하고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국민인식개선사업 추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